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서해정 · 장명선 · 이경민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 저자명: 서해정,
장명선, 이경민. --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p. ; cm

ISBN 978-89-6921-248-1 93300 : 비매품

여성 장애인 [女性障礙人]
권리 보장 [權利保障]

338.3-KDC6
362.4-DDC23

CIP2017025227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재)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서해정(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장명선(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이경민(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자문위원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임재현 (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금지연대 정책조직실장)

최현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발간사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에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0년 이후 다양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행되었음에도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장애인정책과 같이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복합적인 문제로 얽혀 있어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장애관련 정책과 법률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성주류화 관점 외에도 장애여성 단독법률과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장애차별이 해소되도록 하는 트윈 트랙 어프로치(twin track approach)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지원 항목으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공약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괄 및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성장애인의 단독 법률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만약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면 포함되어야 할 조항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먼저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여성주의 관점으로 장애 및 여성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분석해서 기본법 성격의 법률 안을 제안해 주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장명선 교수와 장애여성의 역량강화와 권리보장을 위해 현장의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응해 주신 여성장애인 관계자와 바쁘신 중에도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의 필요성과 내용 분석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모여 논의하고 있는 여성장애인기본법제정추진연대(가칭)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의 타당성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해 주신 법률 자문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



며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온 서해정 부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수고해주신 이경민 연구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장애 및 여성 관련 법률과 정책에 성인지와 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단독법의 필요성과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할 것인지 장애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기존의 장애 및 여성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9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황 화 성

▶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4
II.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및 제도 분석	5
1.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5
2.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 분석	23
3. 소결	34
III.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분석	37
1.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37
2. 여성장애인지원 관련 법안 분석	46
3. 관계 법령과의 비교 및 개선방안	50
4. 쟁점 검토	59
IV.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 논의 결과 분석	63
1. 입법의 필요성 여부	63
2. 사업 범위 중복 및 소관 부처 관련 규정 검토	66
3. 입법의 방식: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69
4.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정책 등의 검토	71
5. 법률 제정 및 내용 검토	77



V. 결론 및 제언	79
1. 결론	79
2. 제언	81
참고문헌	85

▶ 표목차

〈표 2-1-1〉 2016년도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5
〈표 2-1-2〉 2016년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6
〈표 2-1-3〉 전체인구 및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	7
〈표 2-1-4〉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일)에서의 지위	8
〈표 2-1-5〉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	8
〈표 2-1-6〉 성별 장애연금, 일시보상금 수급현황	9
〈표 2-1-7〉 가입한 연금종류	9
〈표 2-1-8〉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10
〈표 2-1-9〉 전체 인구 및 장애 인구의 교육 정도 비교	11
〈표 2-1-10〉 장애인의 성별 교육 정도	12
〈표 2-1-11〉 성별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13
〈표 2-1-1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피해 현황	14
〈표 2-1-13〉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 현황	15
〈표 2-1-14〉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16
〈표 2-1-15〉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유무	16
〈표 2-1-16〉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유	17
〈표 2-1-17〉 성별 결혼상태 및 초혼 연령	18
〈표 2-1-18〉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19
〈표 2-1-19〉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20
〈표 2-1-20〉 외출의 주된 목적	21
〈표 2-1-21〉 장애인의 성별 투표 참여 여부	21
〈표 2-1-22〉 성별 투표 미 참여 사유	22
〈표 2-2-1〉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의 분리통계 자료 현황	23
〈표 3-1-1〉 UN 장애인권리협약 중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	39
〈표 3-1-2〉 여성장애인에 대한 주요 법률 내용	43
〈표 3-2-1〉 기발의된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안)	46
〈표 3-3-1〉 여성장애인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관련법규 내용	5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여성장애인¹⁾은 오랫동안 국내외 정책과 법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여성관련 정책은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장애 관련 정책은 젠더라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여성장애인은 다중차별(multiple discrimination)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각각 별개가 아니라 중첩되고 있으며, 단순히 장애여성의 차별과 억압이 누적되는 개념이 아니라 교차(intersectionality)하여 새로운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 이를 구체적으로 상징화한 것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라고 할 수 있음. 본 조항은 여성장애인의 여성성과 장애의 양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유엔 인권규약 중 최초로 성별과 장애 양쪽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역사적 조항으로 평가할 수 있음(류민희, 2016)
- 그러나 아직까지 현 정부의 여성장애인정책은 위와 같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적 접근보다는 복지관점에서 여성과 장애를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기존의 여성장애인 정책은 임신·출산·양육, 교육·취업, 폭력방지·피해자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여러 부처 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로 여성장애인 정책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나뉘어져 제공되고 있음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의 이중적인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좀 더 여성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함. 또한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취업률, 소득수준, 교육수준이 매우 낮으며, 취업, 교육 기회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

1) 본 보고서에서는 문맥에 따라 '장애여성'과 '여성장애인'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여성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성장애인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단체에 따라서는 단체명에 '장애여성'과 '여성장애인'이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임신·출산·양육에서도 비장애여성에 비해 다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이에 장애여성계에서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인지와 장애인지적 관점의 여성장애인지원법과 같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였으며, 18대 국회의원 故 광정숙의원이 ‘장애여성지원법’을 발의하였고, 그 후 19대 2012년에 김정록의원, 김미희의원이 이와 유사한 ‘여성장애인 지원법’을 발의하였으나 결국 두 법안은 2012년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논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것을 끝으로 별다른 진전으로 보지 못하였음
-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지원 항목으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공약으로 채택되었음. 여기에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하여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임신·출산·양육 등 공동 돌봄 서비스 우선지원과 확대 등이 명시되었음.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여성장애인을 위한 기본 법령을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이는 장애관련 정책과 법률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을 녹이는 성주류화 관점 외에도 장애여성의 차별이 남성장애인과 비장애여성에 비해 너무나 격차가 심하고, 차별양상도 복잡하여 장애여성 단독법률과 정책이 병행되어야만 성평등을 이루고 장애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임. 만약 여성장애인지원법이든 여성장애인기본법이든 그 법률 명칭이 어찌 되었든 간에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단독 법률과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장애여성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괄 및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성장애인의 단독 법률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만약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면 포함되어야 할 조항이나 내용 등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1차적으로 국내 장애관련 법령과 여성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문헌 분석을 하였음. 문헌 연구는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등을 분석하였음
- 두 번째는 통계청, 「2016 장애통계연보」,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을 이용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의 등록 및 장애유형별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실태 부분에서는 경제적 수준 및 고용, 교육, 폭력·차별, 건강권·모성권, 사회 활동 등의 영역에서의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의 양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음
- 세 번째는 제도 분석의 핵심인 장애성별통계를 통해 제도 또는 정책의 수혜자와 예산집행결과를 장애유무와 성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네 번째는 본 연구의 핵심 내용으로 법령 및 문헌검토 등을 통해 국내 여성 및 장애관련 법령에 대해서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법령 체계와 내용을 분석하였고, 입법 관련 쟁점 등을 정리하였음
-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문성 보강을 위하여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장애여성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및 여성장애인 주요 정책인 교육, 폭력, 고용, 성적 및 생산권, 전달체계 등의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또는 FGI 등을 실시하여 법안 제정에 대한 쟁점과 입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상황,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에서 기존 여성장애인지원 법안 등의 수정 및 보완, 새로 추가되어야 할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3.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 본 연구는 국제협약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6조의 장애여성과 관련된 조항부터 시작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등을 분석하였으며, 여성장애인지원법의 단독법률 제정의 타당성 검토 및 제정 시 고려되어야 할 것과 기존 논의된 법률안에서 추가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들을 모색하였다는 것에는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새로운 여성장애인 단독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의 장애인 관련 정책과 법률에서 장애여성 관련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마찬가지로 여성관련 정책과 법률에서 장애여성 관련 내용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대표적인 3개 법률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또한 여성관련 법률들을 모두 분석하는 대신 2012년에 발의되었던 여성장애인관련 법률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여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단독법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이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지원법은 기존 발의되었던 여성장애인지원법을 토대로 구상되어 현재 시점에서 요구하는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Ⅱ.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및 제도 분석

1.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

- 우선, 2016년 말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여성장애인은 1,053,463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41.9%이며, 여성장애인 가운데 1~3급의 중증장애인은 37.3%를 차지함. 남성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4, 5급 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1〉 2016년도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여성	1,053,463 (100.0)	81,799 (7.8)	140,700 (13.4)	169,907 (16.1)	182,075 (17.3)	249,116 (23.6)	229,866 (21.8)
남성	1,457,588 (100.0)	116,033 (8.0)	196,149 (13.5)	264,969 (18.2)	190,979 (13.1)	281,598 (19.3)	407,860 (28.0)
전체	2,511,051 (100.0)	197,832 (7.9)	336,849 (13.4)	434,876 (17.3)	373,054 (14.9)	530,714 (21.1)	637,726 (25.4)

주: 2016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현황. 재구성

- 여성장애인을 기준으로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534,507명(50.74%)으로 절반 정도를 이루고 있음. 다음 청각장애인이 124,094명(11.78%), 뇌병변장애인이 107,097명(10.17%), 시각장애인 102,042명(9.69%)으로 뒤를 이음. 이와 같은 결과는 시각(150,752명, 10.34%), 청각(147,749명, 10.14%), 뇌병변(143,359명, 9.84%) 순인 남성장애인의 유형 분포와의 차이를 지님.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체, 청각, 뇌병변, 정신, 뇌전증 장애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2〉 2016년도 장애유형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장애유형	전체		여자		남자	
전체	2,511,051	(100.00)	1,053,463	(100.00)	1,457,588	(100.00)
지체	1,267,174	(50.46)	534,507	(50.74)	732,667	(50.27)
청각	271,843	(10.83)	124,094	(11.78)	147,749	(10.14)
뇌병변	250,456	(9.97)	107,097	(10.17)	143,359	(9.84)
시각	252,794	(10.07)	102,042	(9.69)	150,752	(10.34)
지적	195,283	(7.78)	77,558	(7.36)	117,725	(8.08)
정신	100,069	(3.99)	48,231	(4.58)	51,838	(3.56)
신장	78,750	(3.14)	32,981	(3.13)	45,769	(3.14)
장루 · 요루	14,404	(0.57)	5,528	(0.52)	8,876	(0.61)
언어	19,409	(0.77)	5,509	(0.52)	13,900	(0.95)
자폐	22,853	(0.91)	3,434	(0.33)	19,419	(1.33)
뇌전증	6,956	(0.28)	3,181	(0.3)	3,775	(0.26)
간	11,042	(0.44)	3,104	(0.29)	7,938	(0.54)
호흡기	11,831	(0.47)	3,009	(0.29)	8,822	(0.61)
심장	5,507	(0.22)	2,057	(0.2)	3,450	(0.24)
안면	2,680	(0.11)	1,131	(0.11)	1,549	(0.11)

주: 2016년 12월 31일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17). 장애인현황. 재구성

1) 경제적 수준 및 고용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장애인과 전체 남성 · 여성 (장애인인구 포함)을 비교해본 결과, 15세 이상 인구 규모에 있어 장애인구는 남성의 비중(57.93%)이 큰 반면, 전체인구는 여성의 비중(50.96%)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전체인구 중 여성의 53.4%(11,911천명)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장애인구의 경우 22.4%(229천명)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50.3%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남성 장애인구와 비교하여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또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전체 여성인구와 비교했을 때 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6.8%인 반면, 남성장애인의 실업률은 6.4%, 전체 여성인구의 실업률은 3.7%이며, 여

성장장애인의 고용률이 20.8%인 반면, 남성장애인의 고용률은 47.1%, 전체 여성인구의 고용률은 51.5%로 두 배 이상의 고용률을 보임

〈표 2-1-3〉 전체인구 및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인구		
		인구수	비율	계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실업률	고용률
장애 인구	여성	1,026	(42.03)	229	214	16	796	22.4	6.8	20.8
	남성	1,414	(57.93)	711	666	45	703	50.3	6.4	47.1
	전체	2,441	(100.00)	941	880	61	1,500	38.5	6.5	36.1
전 체 인 구	여성	22,300	(50.96)	11,911	11,476	436	10,389	53.4	3.7	51.5
	남성	21,464	(49.04)	16,018	15,385	634	5,446	74.6	4.0	71.7
	전체	43,764	(100.00)	27,929	26,860	1,069	15,834	63.8	3.8	61.4

주: 1) 경제활동(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 장애인구, 전체인구 2015년 5월 기준임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전체인구: 통계청(2017), 「경제활동인구조사(2017년 6월)」

- 장애인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전체 가운데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비 임금)의 비율이 29.2%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근로자(임금)가 23.8%, 일용근로자가 18.8%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2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반면 남성근로자의 경우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32%로 가장 높고, 상용근로자가 27.1%로 뒤를 이었음
- 임금근로자 내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일용직과 임시직의 비율이 43.9%인데 반해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33.3% 수준으로 약 10% 차이를 보였으며,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여성이 14.6%, 남성이 27.1%로 절반 이상의 차이를 보임
-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노점을 제외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여성과 남성에 모두 높았으나, 특기할 점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16%로 남성 1.7%에 비해 약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4〉 장애인근로자의 직장(일)에서의 지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23.8	14.6	27.1
	임시근로자	17.2	21.6	15.7
	일용근로자	18.8	22.3	17.5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4.0	2.2	4.7
	자영자1(노점제외)	29.2	21.0	32.0
	자영자2(노점)	1.5	2.3	1.3
	무급가족종사자	5.4	16.0	1.7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 경제활동 중인 장애인의 성별 월평균 임금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50만원 미만’이 47.3%, 남성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이 2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금 수준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1~3위를 차지한 50~150만원 미만이 전체의 약 83%를 차지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100~300만원 미만이 약 55%이었음. 또한 월평균 임금의 평균을 살펴보면, 여성은 74.3만원인데 반해, 남성은 180.2만원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여성 장애인의 근로소득이 남성장애인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5〉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

(단위: %, 만원)

구분	전체	여성	남성
50만원 미만	22.2	47.3	13.4
50~100만원 미만	15.4	20.5	13.6
100~150만원 미만	18.8	15.5	19.9
150~200만원 미만	12.5	7.8	14.2
200~300만원 미만	17.2	5.6	21.2
300~500만원 미만	10.1	3.1	12.6
500만원 이상	3.9	0.2	5.1
전체	100.0	100.0	100.0
월평균 임금 평균	152.5	74.3	180.2

주: 무응답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 장애연금이란 일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3급)²⁾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됨. 장애연금 전체 수급자 중 여성장애인의 수급비율은 16.75%로 남성 수급자(83.24%)에 비해 확연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표 2-1-7>과 같이 여성장애인의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저조한 것에 기인함

<표 2-1-6> 성별 장애연금, 일시보상금 수급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계	장애연금				장애일시 보상금
			소계	1급	2급	3급	4급
여성	수급자	13,080(16.75)	12,616	1,777	4,615	6,224	464
	수급액	56,754,299	51,270,013	9,840,454	20,449,188	20,980,371	5,484,286
남성	수급자	64,994(83.24)	62,881	9,880	22,205	30,796	2,113
	수급액	316,626,166	286,062,444	61,045,403	111,581,341	113,435,700	30,563,722
전체	수급자	78,074(100.0)	75,497	11,657	26,820	37,020	2,577
	수급액	373,380,465	337,332,457	70,885,857	132,030,529	134,416,071	36,048,008

자료: 국민연금공단(2017). 2016년 제29호 국민연금통계연보.

<표 2-1-7> 가입한 연금종류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개인연금 (사적)	기타
여성	19.7	1.1	0.3	0.2	1.2	3.0	0.1
남성	46.4	2.8	0.5	0.4	2.4	4.3	0.3
전체	35.6	2.1	0.4	0.3	1.5	4.0	0.2

주: 1) 중복응답

2) 2014년 기준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과는 다른 「국민연금법」상의 등급 체계로서, 1~4급으로 구분됨.



2) 교육

- 장애인의 학업 포기·중단의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7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당사자 스스로 교육에 의지는 있었으나, 가족의 반대로(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경우가 13%에 달함. 오히려 장애 자체가 학업 중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6.8%에 그침
- 각 학업 포기·중단 사유에 대한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가족의 반대(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 대한 여성과 남성 차이가 크게 나타남. 남성장애인의 경우 3.8%인 반면, 여성 장애인은 21.1%가 가족의 반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8〉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심한장애로 인해	6.8	5.9	7.8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13.0	21.1	3.8
다니기 싫어서	5.9	3.1	9.1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70.1	65.2	75.6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1.5	2.0	0.8
학교 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1	0.0	0.2
편의제공(의사소통지원 등)이 부족해서	0.0	0.0	0.0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1.2	1.2	1.2
기타	1.5	1.6	1.6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 전체 인구나 장애 인구의 그룹 내 교육 정도 비교 결과, 두 그룹 모두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은 점차 줄고,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은 4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은 상승하고 있음
- 그러나 2016년을 기준으로 장애인구의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약 6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전체인구의 경우 약 26% 정도로 나타나 장애인구의 학력 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남.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에도 장애인구는 28.6%인데 반해 전체 인구는 38%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졸

업 이상의 경우에는 장애인구가 12.4%인 반면, 전체 인구는 36%로 세배 가량 차이를 보임. 결과적으로 장애 인구는 저학력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의 비율이 낮은 반면, 전체인구는 저학력의 비율이 낮고, 고학력(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비율이 높음

〈표 2-1-9〉 전체 인구 및 장애 인구의 교육 정도 비교

구 분		전체 (15세 이상)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 이상	
			명	%	명	%	명	%
장애 인구	2013년	2,457,626	1,523,153	62.0	659,018	26.8	275,454	11.2
	2014년	2,449,437	1,473,017	60.1	692,724	28.3	283,696	11.6
	2015년	2,444,194	1,470,735	60.2	672,425	27.5	301,032	12.3
	2016년	2,441,167	1,438,700	58.9	699,331	28.6	303,136	12.4
전체 인구	2013년	42,096,000	12,017,000	28.5	16,087,000	38.2	13,992,000	33.2
	2014년	42,513,000	11,642,000	27.4	16,269,000	38.6	14,601,000	34.7
	2015년	43,017,000	11,479,000	26.7	16,417,000	38.2	15,121,000	35.2
	2016년	43,416,000	11,257,000	25.9	16,516,000	38.0	15,643,000	36.0

주: 1) 중학교 졸업 이하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학교 졸업을 포함하며, 전문대 졸업 이상: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전체 인구는 '천명'단위에서 '명'단위로 변환하면서 백단위 이하 단순화함

3) 장애인구의 2016년은 2016년 5월 기준, 전체 인구의 2016년은 2016년 12월 기준

자료: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6),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 통계청(2016), 「경제활동인구조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28.8%)과 고등학교 졸업(28.1%)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이 36.8%로 많았으며, 무학을 포함한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 57.8%로 절반을 차지하였음.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 졸업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이 54.7%로 나타남. 특히 무학의 경우 남성이 4.7%인데 반해, 여성은 21%로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의 학력은 남성이 20.2%, 여성이 8.6%로 나타나 남녀 간 학력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2-1-10〉 장애인의 성별 교육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무학	11.6	21.0	4.7
초등학교	28.8	36.8	23.0
중학교	16.2	14.2	17.7
고등학교	28.1	19.3	34.5
대학이상	15.3	8.6	20.2
전체	100.0	100.0	100.0

주: 1) 대학이상-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2) 무응답제외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3) 폭력 · 차별

- 장애로 인해 경험한 사회적 차별 중 또래학생으로부터 당한 차별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보험 계약 시의 차별 경험도 45.4%로 높게 나타남.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는 과정에서의 차별도 초등학교 때는 38.8%, 중학교 때는 31.6%로 나타남. 이후 취업 과정에서의 차별도 35.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차별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학교 입학, 전학 시와 학교생활, 결혼, 보험 계약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더욱 많은 차별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한편 남성장애인의 경우 취업과 직장생활의 측면에서 여성장애인보다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있어서도 성별 차이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2-1-11〉 성별 사회적 차별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입학, 전학	유치원(보육시설)	27.1	33.5	23.6
	초등학교	38.8	43.5	35.9
	중학교	31.6	34.4	30.0
	고등학교	25.1	22.2	26.6
	대학교	12.5	12.3	12.6
학교생활	교사로부터	18.7	20.6	17.6
	또래학생으로부터	47.1	53.6	43.3
	학부모로부터	13.7	14.3	13.4
결혼		16.4	18.3	15.2
취업		35.8	32.8	37.1
직장생활	소득(임금)	23.9	21.9	24.6
	동료와의 관계	20.0	19.1	20.4
	승진	13.3	10.0	14.6
운전면허제도상(취득 시)		10.2	10.1	10.2
보험제도상(계약 시)		45.4	47.2	44.4
의료기관 이용 시		4.6	4.3	4.7
정보통신 이용 시(방송포함)		1.9	2.0	1.8
지역사회생활(음식점, 극장, 공연장, 수영장 등)		7.3	6.8	7.6

주: 장애로 인해 본인이 경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 물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 여성장애인이 가족으로부터 겪는 차별과 폭력 피해는 약 8.2%(‘자주 있음’과 ‘가끔 있음’의 합)로, 남성장애인(6.6%)보다 높게 나타남. 차별 및 폭력의 유형은 언어적 폭력이 55.8%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 폭력이 20%로 뒤를 이음. 여성장애인의 경우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및 유기,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언어폭력, 경제적 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였음. 차별 및 폭력의 주 가해자는 대부분 배우자(37.6%)였으며, 자녀(19.1%)나 형제·자매(18.6%)에 의한 피해도 상당수에 이르렀음. 또한 배우자,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배우자의 가족에 의한 폭력 피해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배우자의 가족에 의한 차별 및 피해 경험은 없는 반면, 여성장애인은 5.4%로 조사되었음

〈표 2-1-12〉 장애인에 대한 가족 내 차별·폭력 피해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차별·폭력 정도	자주 있음	1.1	1.2	1.1
	가끔 있음	6.1	7.0	5.5
	없음	92.7	91.8	93.4
차별·폭력 유형	언어폭력	57.3	55.8	58.8
	정신적 폭력	19.9	20.0	19.9
	신체적 폭력	9.4	11.0	8.0
	성적학대	—	—	—
	방임 및 유기	9.0	10.0	8.0
	경제적 폭력	4.3	3.3	5.3
	기타	—	—	—
주 가해자	배우자	34.1	37.6	30.9
	부모	17.8	16.7	18.8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15.9	19.1	12.9
	형제, 자매	25.5	18.6	31.9
	조부모	0.9	0.5	1.3
	손자녀	0.5	0.6	0.5
	배우자의 가족	2.6	5.4	—
	기타	2.6	1.6	3.7

주: 1)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에 대한 문항은 ‘차별·폭력 정도’ 중 ‘자주 있음’과 ‘가끔 있다’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2) ‘차별·폭력 유형’, ‘주가해자’ 비율은 무응답자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3%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0.3%인 남성장애인의 성범죄 피해율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임. 여성장애인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2.4%로 가장 많았고, 이웃이 22.6%, 가족이 11.7%로 나타남. 성범죄 피해를 입으면 대부분의 경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는 것(46.1%)으로 나타났으며, 대처방법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14.9%에 달한 반면 그 자리에서 항의(19.3%)하거나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11.8%) 등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음

〈표 2-1-13〉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 현황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경험여부	있다	1.4	3.0	0.3
	없다	98.6	97.0	99.7
주 가해자	근친(가족)	10.2	11.7	—
	이웃	19.8	22.6	—
	먼 친척	0.5	0.6	—
	모르는 사람	39.6	42.4	19.9
	학교관계자	0.4	0.4	—
	남자친구	8.8	7.6	17.0
	종교인	2.4	2.8	—
	채팅상대자	3.3	3.8	—
	서비스제공자(복지인력 등)	2.5	1.3	11.3
	학원관계자	12.5	6.8	51.8
	기타	—	—	—
대처방법	무시한다	3.6	3.4	5.6
	참는다	51.5	46.1	89.3
	그 자리에서 항의	16.8	19.3	—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10.3	11.8	—
	몰라서 그냥 넘어감	14.9	16.3	5.2
	기타	2.8	3.2	—

주: '주가해자', '대처방법'은 '경험 여부' 문항 중 '있음'에 응답한 자에 한하여 질문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4) 건강권 · 모성권

- 장애와 더불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가진 여성장애인은 83.7%로, 남성장애인(70%)에 비해 13% 정도 높게 나타남³⁾
-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22.5%는 병원 진료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남성장애인은 16.7%정도로 나타남.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진료를 포기한 경험이 더욱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28.3%, 남성의 25.9%가 진료의 필요성은 느꼈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였음
- 치과를 포함한 병·의원 진료를 포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였음. 병·의원은 58.3%, 치과는 79.9%의 여성장애인이 경제적인 문제로 진료를 포기하였음. 치과의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가 많기 때문에 진료 포기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됨

〈표 2-1-14〉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있음	75.8	83.7	70.0
없음	24.2	16.3	30.0
전체	100.0	100.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표 2-1-15〉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유무

(단위: %)

구분	병·의원		치과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있음	22.5	16.7	28.3	25.9
없음	77.5	83.3	71.7	74.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3) 응답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약 43%를 차지하고 있고,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인구 비율이 높은(60세 이상 남성 비율 44.4%, 여성 비율 64.2%) 까닭으로 볼 수 있다.

〈표 2-1-16〉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이유

(단위: %)

구분	병·의원		치과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경제적 이유	58.3	59.2	79.9	79.6
예약하기 힘들어서	2.1	1.7	0.6	0.9
교통편이 불편해서	18.9	11.6	5.3	4.0
내가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	4.9	7.3	1.4	3.2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1.8	3.1	0.7	2.0
증상이 가벼워서	4.0	8.8	5.0	6.0
의료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2.1	1.6	1.4	1.2
의사소통의 어려움	4.4	4.6	2.6	1.7
기타	3.5	2.2	2.9	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 여성장애인의 42.5%가 현재 배우자가 있는 상태로, 남성장애인의 63.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사별한 경우는 여성장애인 38.2%, 남성 5.6%로 여성장애인의 사별 경험이 더욱 많았음. 미혼은 여성장애인 10.1%, 남성장애인 19.2%로 남성장애인의 미혼률이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의 초혼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여성의 경우에는 10대가 23.2%로 뒤를 이었고, 남성은 30대가 25.5%로 나타남. 평균 초혼 연령도 여성장애인이 22.7세인 반면, 남성장애인이 28.1세로 남성장애인의 초혼 나이가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17〉 성별 결혼상태 및 초혼 연령

(단위: %, 세)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결혼상태	유배우	54.7	42.5	63.7
	사별	19.5	38.2	5.6
	이혼	8.7	8.0	9.3
	별거	1.6	1.0	2.0
	미혼	15.4	10.1	19.2
	기타(미혼모/부)	0.1	0.1	0.1
	소계	100.0	100.0	100.0
초혼 연령	만10~19세	12.0	23.2	2.9
	만20~29세	69.0	70.6	67.6
	만30~39세	16.5	5.4	25.5
	만40~49세	2.0	0.5	3.2
	만50세 이상	0.5	0.3	0.8
	소계	100.0	100.0	100.0
	평균연령	25.6	22.7	28.1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 여성장애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비장애인 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음. 우선, 본인 혹은 배우자의 장애가 아이에게 유전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고,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 의료비용의 측면에서도 산전, 분만, 산후 과정에서의 진료비용이 비장애여성에 비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산후 조리 및 양육과정에서도 산후조리원이나 돌봄서비스 등의 관련 서비스에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서해정 · 배선희 · 이경민, 2016)
- 산후조리의 주된 도우미로서 친정식구가 47.5%로 가장 많았으며, 시댁식구 18.2%, 남편 14.3%로 뒤를 이었음. 도움인력은 남편, 친정 · 시댁식구 등 가족자원과 복지기관,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등의 외부자원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여성장애인의 가족자원 활용도는 80%, 외부자원 활용도는 19%로 대부분이 가족에 의지하고 있음. 그러나 연령이 낮을수록 산후조리원이나 산후도우미 등 외부 인력의 활용이 높게 나타났고, 경증장애인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중증장애인의 약 16배 정도로 높게 나타남. 이는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산후조리원의 접근성이 낮은 결과라고 볼 수 있음

〈표 2-1-18〉 출산 후 산후조리 도우미 및 충분도

(단위: %)

구분	전체	연령		장애정도	
		18~44세	45~64세	중증 (1~3급)	경증 (4~6급)
남편	14.3	11	19.7	24	6.7
친정식구	47.5	42	57	45.2	50.6
시댁식구	18.2	17.2	20	19.6	15.2
산후 조리 도우미					
복지기관	1.2	2	0	0	2.3
산후조리원	10.1	16.1	0	1.3	17.5
산후도우미	7.7	11.1	2	8.8	7.1
돌봐주는사람없었음 (혼자했음)	0.9	0.6	1.3	1.1	0.7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여성만 응답함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5) 사회활동

- ‘혼자 외출’ 가능여부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18.6%(남성 13.5%)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가운데(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가 ‘거의 매일’인 경우는 57.6%로 남성장애인의 74.4%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어 주 1~3회 정도 외출하는 경우가 27.2%에 그쳤으며, 전혀 외출을 하지 않는 비율도 6%로 나타남

〈표 2-1-19〉 지난 1개월 동안 외출 빈도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거의 매일	67.3	57.6	74.4
주 1~3회	20.3	27.2	15.2
월 1~3회	7.2	9.2	5.8
전혀 외출하지 않음	5.2	6.0	4.6
전체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외출하지 않는 이유는 남녀 모두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해서’가 절반 이상(여성 65.9%, 남성 56.2%)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여성장애인은 주로 산책과 운동(29.8%)을 위해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통근과 통학이 23.1%로 나타나 남성장애인의 절반 가까이(48.8%)가 통근, 통학을 위해 외출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그 밖에 여성장애인은 병원 진료(18%), 친척 · 친구 · 이웃 방문(10.6%), 지역사회시설 이용 및 행사 참여(11.2%) 부분에서 남성장애인보다 더 많은 활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20〉 외출의 주된 목적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통근·통학	38.0	23.1	48.8
병원 진료	12.3	18.0	8.2
쇼핑(물건사기)	3.4	6.0	1.5
산책·운동	28.9	29.8	28.3
친척, 친구, 이웃방문	7.9	10.6	5.9
여행	0.0	0.1	0.0
지역사회 시설 이용/행사 참여	7.8	11.2	5.4
구직	0.7	0.1	1.2
기타	0.9	1.0	0.7
전체	100.0	100.0	100.0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의 투표 참여율은 약 75%이며, 남성 장애인은 77.1%인데 반해 여성 장애인은 71.7%로 여성장애인의 투표율이 낮음
- 투표 미참여 사유로서 ‘몸이 불편하기 때문’이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원치 않아서’가 34.1%로 나타남. 특히 여성 장애인의 약 50% 정도가 장애를 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보았음

〈표 2-1-21〉 장애인의 성별 투표 참여 여부

(단위: %)

참여여부	전체	여성	남성
참여함	74.8	71.7	77.1
참여하지 않음	22.0	25.6	19.4
비 해당(투표권 없었음)	3.2	2.7	3.6

주: 1) 제6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비율임

2) 비 해당: 만 19세 미만, 금치산자 등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재구성



〈표 2-1-22〉 성별 투표 미 참여 사유

(단위: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교통 불편	1.1	1.1	1.0
편의시설 부족	1.0	0.4	1.6
몸이 불편해서	43.9	51.4	36.6
도우미가 없어서	3.0	3.8	2.2
정보 부족	5.2	5.5	5.0
시간이 없어서	8.4	5.7	11.1
본인이 원치 않아서	34.1	29.1	39.0
주위의 시선 때문에	0.7	1.2	0.1
기타	2.6	1.7	3.4
전체	100.0	100.0	100.0

주: 무응답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6), 「2016장애통계연보」.

2.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 분석

-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가사 및 자녀양육,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교육, 건강, 고용과 관련하여 각 영역별 지원제도 수혜 현황을 파악하고자 각 제도별로 장애유무별, 성별 지원인원과 예산 집행 현황을 조사하였음. 조사대상이 된 제도는 첫째,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둘째, 정책 대상의 범위가 넓고, 셋째,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29개의 제도를 선정하였음
- 각 제도별 소관부처의 협조를 받아 지원인원과 예산 집행 현황을 장애유무,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고용 영역의 5개 제도(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를 제외한 24개 제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
- 29개 제도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장애구분 없이 지원하는 제도(일반 제도)로 특성을 나눌 수 있으며, 일반 제도의 경우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과 성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건강검진 제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에서 성별, 장애유무별 지원 현황에 대한 분리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표 2-2-1〉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의 분리통계 자료 현황

연번	영역	제도(사업)명	분리통계 자료 현황
1	모성보호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	성별, 장애유무별
2		마취약·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및 의료비 등 지원	성별
3		난임부부 지원 사업	없음
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성별, 장애유무별
5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성별
6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	성별
7	가사·자녀양육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성별, 장애유무별
8		아이돌봄 지원사업	성별
9		공동 교육·보육 과정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성별
10		방과후 과정비 지원	성별
11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교육정보화지원)	성별



연번	영역	제도(사업)명	분리통계 자료 현황
12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별, 장애유무별 (예산 통계 없음)
13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없음
1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별, 장애유무별 (예산 통계 없음)
15	교육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성별, 장애유무별
16		평생교육	없음
17		특수교육(특수학교)	성별, 장애유무별 (예산 통계 없음)
18		특수교육(특수학급)	
19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 · 직업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고등학교, 전공과)	
20		장애인 고등교육	
21		장애인 평생학습	없음
22	건강	일반건강검진	성별, 장애유무별
23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성별, 장애유무별
24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성별, 장애유무별 (예산 통계 없음)

주: 1) 고용영역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인원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는 해당부처에 요청하였으나 회신 받지 못함

2) 장애분리 통계가 없는 경우 아래 분석에서 제외함

1) 여성장애인 대상 제도

(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장애인	여성	610	100.0	1,160	100.0	1,271	100.0
	남성	—	—	—	—	—	—
소계		610	100.0	1,160	100.0	1,271	100.0

② 예산 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장애인	여성	410	100.0	779	100.0	850	100.0
	남성	—	—	—	—	—	—
소계		410	100.0	779	100.0	850	100.0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지원인원과 집행 예산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16년 1,271명에게 총 850백만원이 지원되었음

(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장애인	여성	50,187	100.0	45,782	100.0	55,196	100.0
	남성	—	—	—	—	—	—
소계		50,187	100.0	45,782	100.0	55,196	100.0



② 예산 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장애인	여성	699	100.0	520	100.0	1,595	100.0
	남성	—	—	—	—	—	—
소계		699	100.0	520	100.0	1,595	100.0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15년도에 지원규모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2016년 55,196명을 대상으로 1,595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됨

2) 장애인 대상 제도

(1) 특수교육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직업 교육, 장애인고등교육)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특수학교 ¹	여성	8,529	33.73	8,783	34.40	8,736	34.30
	남성	16,759	66.27	16,748	65.60	16,731	65.70
소계		25,288	100.00	25,531	100.00	25,467	100.00
특수학급 ¹	여성	15,851	34.61	15,900	34.30	15,630	33.51
	남성	29,952	65.39	30,451	65.70	31,015	66.49
소계		45,803	100.00	46,351	100.00	46,645	100.00
특수교육 대상자 진로·직업교육 ²	여성	8,726	34.11	8,927	34.54	8,835	34.54
	남성	16,855	65.89	16,915	65.46	16,744	65.46
소계		25,581	100.00	25,842	100.00	25,579	100.00
장애인고등교육 ³ (장애대학생 도우미지원)	여성	1,036	39.20	429	43.47	399	42.27
	남성	1,607	60.80	558	56.53	545	57.73
소계		2,643	100.00	987	100.00	944	100.00

주: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함

- 2) 진로, 직업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중 · 고 · 전공과 과정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3) '15년부터 장애대학생도우미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되어 '14년에 비해 수혜자 수 감소함
- 4) 장애, 성별을 구분한 예산 집행 자료 없음

-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 전체 장애인 가운데 여성장애인은 30~40%, 남성장애인은 60~70%를 차지함.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장애인고등교육)은 여성장애인이 42%(399명)로 나타남

(2) 장애인구강진료센터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장애인	여성	9,929	40.60	12,178	40.70	16,520	39.60
	남성	14,504	59.40	17,771	59.30	25,213	60.40
소계		24,433	100.00	29,949	100.00	41,733	100.00

주: 성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 없음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여성장애인 지원비율은 16년 기준 약 40%(16,520명)으로 나타남. 이는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병원진료 횟수가 적은 실태와 맥락을 같이 함(표 2-1-15 참고)



3) 일반 제도

(1)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체	여성	2,652	100.0	2,485	100.0	2,500	100.0
장애인	여성	203	7.7	203	8.2	196	7.8

주: 행복e음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자를 추출하고, 신청자에 대한 진료비 발생분(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을 대조하여 작성

② 예산 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전체	여성	1,075	100.0	1,003	100.0	1,014	100.0
장애인	여성	86	8.0	84	8.3	81	8.0

주: 1) 장애인 등록여부는 보건복지부 제공자료 기준으로, 공단이 장애인의료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을 목적으로 연계받은 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2) 요양기관 지급기준이며, '17.8월 현재 청구가 취소된 건은 제외됨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2016년 지원인원은 장애인 과 비장애인을 합한 전체 인구 가운데 2,500명으로 15년 기준 다소 상승하였으며, 1,014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 장애인의 경우 16년 지원인원은 196명으로 전체 가운데 7.8%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예산 중 8%인 81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됨

(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체	여성	4,484	41	4,397	40	4,076	40
	남성	6,475	59	6,501	60	6,117	60
소계		10,959	100	10,898	100	10,193	100
장애인	여성	3,308	40	3,279	39	3,058	38
	남성	4,916	60	5,088	61	4,888	62
소계		8,224	100	8,367	100	7,946	100

주: 추출기간 내에 1회 이상 서비스 결과가 존재하는 사업수혜자 및 예산 집행 결과 기준

② 예산 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액 (결제금액)	비율	집행액 (결제금액)	비율	집행액 (결제금액)	비율
전체	여성	9,727	40	8,865	40	9,328	39
	남성	14,409	60	13,348	60	14,298	61
소계		24,137	100	22,213	100	23,627	100
장애인	여성	7,393	40	6,841	39	7,308	38
	남성	11,244	60	10,799	61	11,862	62
소계		18,638	100	17,641	100	19,170	100

주: 예산 집행액은 서비스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장애여부는 행복e음 자료와 매칭하였음

-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의 16년도 전체 지원인원은 10,193명이며, 그 가운데 장애인은 7,946명 지원됨. 지원규모는 14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15년도에 다소 줄었으나, 16년도에는 전체인구에 23,627백만원, 장애인구에 19,170백만원으로 예산 집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이 약 40%, 남성장애인이 약 60%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 특기할 점은 14년부터 16년에 이르면서 여성장애인의 이용률을 미세하게 감소하였고, 남성장애인의 이용률이 다소 상승함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상담소/성폭력보호시설/해바라기센터)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체	여성	49,806	94.4	52,216	95.0	49,959	95.3
	남성	2,936	5.6	2,777	5.0	2,385	4.5
	미상	—	0.0	—	0.0	90	0.2
소계		52,742	100.0	54,993	100.0	52,434	100.0
장애인	여성	6,190	92.0	5,238	93.6	4,339	90.2
	남성	536	8.0	359	6.4	465	9.7
	미상	—	0.0	—	0.0	4	0.1
소계		6,726	100	5,597	100	4,808	100

주: 장애 유무별, 성별 예산 집행 자료 없음

-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를 포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관련 제도의 2016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52,434명, 그 중 장애인구는 4,808명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95%로 나타난 반면, 장애인구의 경우 여성이 90%로 나타나 장애 남성의 서비스 수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전체	여성	8,410	100.00	9,416	100.00	7,397	100.00
	남성	—	—	—	—	—	—
소계		8,410	100.00	9,416	100.00	7,397	100.00
장애인	여성	82	100.00	151	100.00	309	100.00
	남성	—	—	—	—	—	—
소계		82	100.00	151	100.00	309	100.00

주: 1) 등록장애인 및 경계성 장애인 포함
2) 장애인 지원 예산은 따로 분류되지 않음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제도의 경우 전체인구는 7,397명, 그 중 장애 인구는 309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전체 인구는 2015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장애 인구는 해를 거듭할수록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일반 건강검진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전체	여성	7,642,333	5,585,304	73.1	8,125,612	6,061,219	74.6	8,300,948	6,348,480	76.5
	남성	8,813,881	6,716,277	76.2	9,231,115	7,152,110	77.5	9,332,474	7,360,932	78.9
소계		16,456,214	12,301,581	74.8	17,356,727	13,213,329	76.1	17,633,422	13,709,412	77.7
장애인	여성	312,883	205,178	65.6	351,630	232,804	66.2	352,466	238,056	67.5
	남성	476,565	328,520	68.9	534,256	381,362	71.4	535,423	391,011	73
소계		789,448	533,698	67.6	885,886	614,166	69.3	887,889	629,067	70.9

② 예산 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전체	여성	206,766	44.6	235,073	45	256,322	45.7
	남성	257,014	55.4	287,208	55	304,925	54.3
소계		463,780	100	522,281	100	561,247	100
장애인	여성	7,596	37.7	9,029	37.1	9,612	37.2
	남성	12,572	62.3	15,314	62.9	16,198	62.8
소계		20,167	100	24,343	100	25,809	100

- 일반 건강검진 제도의 2016년 전체 인구 수혜 규모는 13,709,412명, 그 가운데, 장애인구는 629,067명으로 4.5% 수준임. 수검률을 살펴보면 전체인구는 77.7%의 수검률을 보인 반면, 장애인구는 70.9%로 낮게 나타남. 또한 전체인구는 수검률의 성별차이가 약 2%인 반면, 장애인구는 약 6%의 차이를 보임. 여성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67%정도로 낮음
-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으며, 16년 기준 전체 인구가 561,247백만원, 그 중 장애인구가 25,809백만원 집행함

(6)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① 사업 수혜자

(단위: 명,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전체	여성	551,901	415,772	75.3	533,753	409,983	76.8	532,317	421,322	79.1
	남성	546,444	410,617	75.1	518,856	402,099	77.5	525,050	417,643	79.5
소계		1,098,345	826,389	75.2	1,052,609	812,082	77.1	1,057,367	838,965	79.3
장애인	여성	21,162	16,077	76	21,693	16,543	76.3	20,645	16,137	78.2
	남성	33,760	24,209	71.7	33,528	24,744	73.8	32,356	24,596	76
소계		54,922	40,286	73.4	55,221	41,287	74.8	53,001	40,733	76.9

② 예산 집행결과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집행액	비율
전체	여성	27,623	54.4	28,680	54.6	30,677	54.5
	남성	23,125	45.6	23,865	45.4	25,594	45.5
소계		50,748	100	52,545	100	56,271	100
장애인	여성	1,068	43.9	1,157	44.1	1,175	43.8
	남성	1,363	56.1	1,469	55.9	1,507	56.2
소계		2,432	100	2,626	100	2,682	100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제도의 2016년 전체 인구 수검인원은 838,965명, 그 중 장애인구의 수검인원은 40,733명임. 전체인구의 수검률은 대상자 대비 79%인 반면, 장애인구의 수검률은 약 77%로 나타남. 수검률의 성별차이는 전체인구의 경우 남녀 수검률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장애인구는 약 2%의 차이로 여성의 수검률이 높음
- 전체 인구의 예산 집행 현황은 56,271백만원, 장애인구는 2,682백만원으로 나타남. 수검률 및 예산 집행 규모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소결

- 전체 장애인의 41.9%(2016년 말 기준)를 차지하는 여성장애인의 생활 실태는 남성장애인 혹은 비장애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음. 먼저, 경제적 수준이나 고용 실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남성장애인 절반 수준의 여성장애인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두 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음. 고용상태 역시 여성장애인의 고용불안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높았으며, 임금수준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낮음
- 교육수준 역시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이 절반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학업 중단 사유 가운데 가족의 반대에 의한 학업 중단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큰 차이로 높게 나타남
-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 및 폭력 경험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겪는 차별 및 폭력 피해가 남성장애인의 경우보다 높았으며,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신체적 폭력, 방임 및 유기 등의 폭력이 높게 나타남. 성범죄 피해율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의 10배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피해를 당하고도 여성장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건강권 및 모성권의 측면에서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을 가진 비율이 높았으나, 많은 경우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 진료를 포기하였음. 또한 여성장애인은 임신 후 병원 이용, 진료, 출산, 산후조리, 양육의 과정에서 비장애여성보다 더욱 큰 어려움과 차별을 겪음
- 사회 활동 수준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표 참여율도 낮게 나타남
- 위에서 드러난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어려움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가사·양육, 폭력, 교육, 건강, 고용 등 여섯 가지 정책 영역에 따른 세부 제도들의 수혜 현황을 살펴보았음. 영역별로 살펴보면, 고용 영역은 5개 제도, 모성보호 영역은 6개 제도, 가사·자녀 양육 영역은 5개 제도,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영역은 3개 제도, 교육 영역은 7개 제도, 건강 영역은 3개 제도로, 이러한 제도들은 여성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여성장애인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제도가 총 29개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각 제도마다 장애유무별, 성별 지원 인원과 예산 집행 현황 등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제도별로 여성장애인에게 정책 또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각 제도마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위에서 밝힌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사료됨. 결국 여성장애인의 제도 접근성 강화 혹은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Ⅲ.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분석

1. 여성장애인 법제 현황

1) 국제협약

(1) UN 장애인권리협약

-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20개국이 가입한 2008년 5월 3일부터 발효됨.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서명하고 2009년 1월 10일부터 발효되었음
- 이 협약은 장애인의 문제를 시혜적 복지차원에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큰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전문과 총 50조로 구성되어 있음. 본 협약의 전문에서는 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장을 위한 선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협약의 세부적인 조항 내용을 보면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협약의 총칙을 규정한 부분(제1조-제9조)과 시민·자유권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한 부분(제10조-제30조), 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한 부분(제31조-제50조) 등임
- 우선 모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보장하고 장애인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조), 의사소통, 언어, 장애로 인한 차별, 합리적 편의, 보편적 설계 등에 대한 정의(제2조), 일반원칙과 일반의무(제3조-제4조), 평등과 차별금지(제5조), 여성장애인(제6조), 장애아동(제7조), 인식제고(제8조), 접근성(제9조) 등을 규정함. 그 이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위원회 등 추진체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전문에서 (d)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상기하며 ---,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적 및 기타 견해, 국적, 인종적, 토착적 또는 사회적 배경,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악화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염려하며, (q)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내외에서의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방임 또는 부주의한 처우, 혹사 또는 착취에 있어 보다 더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며, (s)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 성별의 관점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제3조 일반원칙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여성 장애인에 대한 규정의 내용을 보면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⁴⁾
- 제8조 인식제고조항에서 당사국은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선입견 그리고 유해한 관습의 근절 등을 위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6조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관해서는 제1항에서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에 기반을 둔 형태를 포함하여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2항에서는 당사국은 특히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및 개호인을 위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보조 및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러한 보조 및 지원에는 착취, 폭력과 학대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포함됨. 당사국은 연령, 성별,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항에서는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독립기관을 통해 효과

4) 이 조항 내용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것으로 실무그룹초안에서는 15조에서 다루어졌으나 찬성과 반대가 크게 엇갈리고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하여 조항제목만 제시되어 있고 내용은 없는 상태로 제시되었다 제7차 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수정된 의장안에서 제6조 내에 2개의 항으로 나누어 제시되었다.(변용찬(2006). UN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의의. 국제사회보장동향, 117-124.)

적으로 감시해야 함. 제4항에서는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 인지 및 심리적 회복,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해야 함, 제5항에서 당사국은 여성과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적재적소에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관련 사례를 확인, 조사하고 때에 따라 기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이 협약에서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차별과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적어도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에 대한 모성보장권, 건강권, 일·가정양립 등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표 3-1-1〉 UN 장애인권리협약 중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

구분	조문 내용
전문	(d)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상기하며 - (p)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및 기타 견해, 국적, 인종적, 토착적 또는 사회적 배경, 재산, 출생, 연령 혹은 기타 신분에 따라 복합적이거나 악화된 형태의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어려운 상황들을 염려하며, (q)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가정 내외에서의 폭력, 상해 또는 학대, 방임 또는 부주의한 처우, 학사 또는 착취에 있어 보다 더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하며, (s)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는 모든 노력에 있어 성별의 관점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3조 일반원칙	(g) 남성과 여성의 평등
제6조 장애여성	(a)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이 다중적인 차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b) 당사국은 본 협약에서 제시된 인권 및 기본적인 자유의 향유와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발전, 향상,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구분	조문 내용
제8조 인식제고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제16조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국은 가정 내외에서 성별에 기반을 둔 형태를 포함하여 착취, 폭력과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 행정, 사회, 교육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2. 당사국은 또한 그 중에서도 특히 장애인과 이들의 가족 및 개호인을 위한 적절한 형태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보조 및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보조 및 지원에는 착취, 폭력과 학대를 피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통한 방식이 포함된다. 당사국은 연령, 성별, 장애를 고려한 보호 서비스를 보장한다. 3.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과 학대 발생을 막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모든 시설과 프로그램들을 독립기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감시한다. 4. 당사국은 보호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의 희생자가 된 장애인들의 신체, 인지 및 심리적 회복, 재활과 사회재통합을 증진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회복과 재통합은 건강, 복지, 자아존중, 존엄 그리고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과 연령에 따른 구체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5. 당사국은 여성과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적재적소에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및 학대관련 사례를 확인, 조사하고 때에 따라 기소한다.

2) 국내 관련법률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중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음

(1)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란 법명으로 처음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 총9장 90조로 구성되어 있음.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은 장애인의 인권, 재활 및 복지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장애인에 관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제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시책 강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9조제2항에서도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제3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조리를 돕기 위해 도우미 파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제5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2007년 제정되었으며 6장 총 5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



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은 제33조에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용자의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 등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3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제거를 위한 정책 및 법적정비 등 적극적 조치 강구, 통계 및 조사연구에서도 장애여성 고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기회제한이나 배제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은 1990년 제정되었으며 6장 87조로 구성되었고,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률 내용 중 여성장애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3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는 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제21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30조제3항에서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에서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적용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이 때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3-1-2〉 여성장애인에 대한 주요 법률 내용

법률명	조항	관련조항 내용
장애인 복지법	제7조(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책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산후 도우미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활동 지원급여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법률명	조항	관련조항 내용
		<p>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p>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34조(장애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 지도원,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법률명	조항	관련조항 내용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 하려는 사업주에게 그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다른 민간 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지역 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p>③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p>
	제30조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p>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제28조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3조에 따라 낼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p> <p>③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p> <p>④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대상인 장애인 근로자 및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p>



2. 여성장애인지원 관련 법안 분석

1)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의 구성 및 내용

- 현재까지 국회에 상정된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안은 제19대 국회때 김정록의원이 대표발의(2012.9.3. 발의)한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김미희의원이 대표발의(2012.9.28. 발의)한 ‘여성장애인지원법안’ 2건이 있음. 이 두 법률안은 19대 국회임기만으로 폐기되었음
- 20대 국회에 들어서 이종명의원이 대표발의(2017.5.24.)한 ‘장애인기본법안’과 양승조위원이 대표발의(2017.1.24.)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음. 이 두 법률안은 장애인 전체에 대한 법안이므로 여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만 참고로 하고자 함
- 여성장애인에 관련되어서 발의된 김정록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3장 2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김미희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총 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두 법률안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여성장애인 지원법에 대한 법안 구성 시 참고가 되므로 검토할 가치가 있음. 두 법률안의 구성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2-1〉 기발의된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안)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록 의원 발의)	여성장애인 지원법안 (김미희 의원 발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8조 모성보호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여성장애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자립생활의 지원 제9조 교육지원 제10조 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제11조 여성장애인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정록 의원 발의)	여성장애인 지원법안 (김미희 의원 발의)
제9조 자녀양육지원 제10조 성폭력 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11조 교육지원 제12조 고용지원 제13조 자립생활의 지원 제14조 의료지원 제15조 가족지원 제16조 여성장애인단체 등의 지원 제17조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3장 보칙 제19조 청문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제1조(시행일)	제12조 의료비 지원 제13조 고용 지원 등 제14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15조 여성장애인단체 지원 제16조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7조 청문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 관한 경과 조치)

2) 주요 내용

- 김정록의원이 발의한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
 -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함(안 제2조)
 -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장애인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안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5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 또는 양육비 지원,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도우미 지원,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학령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을 위한 기초학습 교육과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 김미희의원이 발의한 ‘여성장애인지원법’의 주요 내용

-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함(안 제2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 한 후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평생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1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 기초역량강화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관계 법령과의 비교 및 개선방안

1) 추진체계

- 김정록의원안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법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김미희의원안에서는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추진체계는 매우 중요하나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둘 경우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중복될 우려가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조정위원회의 기능⁵⁾에 ‘여성장애인의 모성보장, 장애인에 대한 폭력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봄
- 이종명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본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법안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 중 여성가족분과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권리 및 지원정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봄

2) 위원회에 여성장애인 참여규정

-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시 여성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5)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조제4항의 규정 내용 중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다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것을 추가로 규정하여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시에도 여성들의 균형적 참여를 위해 제10조제4항의 내용을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실태조사

- 김정록의원안 제6조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김미희의원안에서는 제7조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실태조사를 따로 하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넣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여성장애인정책 종합계획

- 김정록의원안은 제7조에서 여성장애인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김미희의원안은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장애인관련법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따로 여성장애인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김정록안은 제7조제2항에서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여성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성폭력 폭력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모성보호와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김미희안은 제5조제2항에서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재원의 조달방법, 민관협력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규정할 내용으로는 우선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모성권 보장과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 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계획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5) 모성보호

- 김정록안은 제8조에서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김미희안은 제10조에서 모성보호를 위해 출산비용, 임신부인 여성장애인이 산전산후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지원,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서 산전·산후도우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55조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법 제10조에서 임신부 등에 대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유산 후 등의 지원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므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의 모·부성 권리보장에 의거해 모성보호가 아니라 조문명을 ‘모성권 보장’이라고 규정하고 내용으로는 출산비용, 산전·산후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지원,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지원, 임신 및 유산후의 건강관리지원 등으로 규정하면 될 듯함

6) 성폭력 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김정록안에서는 제10조에서 성폭력 등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고 김미

회의원안은 제14조에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장애여성
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실시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여성보다 여성장애인보다 매우 크므로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
는 것이 필요함

7)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20조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장애인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교육기회에서나
교육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이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필요
하므로 교육지원에서의 성별차별금지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단계별
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서 자녀교육비 지급을 규정하고 「영유아보육법」 제
28조에서 보육의 우선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양육지원은 여성장애인에
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따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장애아동을 양
육시에는 더 어려움이 크므로 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 장애인
의 고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33조에서 여성장애인의 근로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은 이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
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의 정도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거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서 의료와 재활치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제36조에
서는 의료비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임신·출산 및 건강진료 등을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경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여 건강권보장을 하는 것이 필요함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제4항에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장애유형에 따른 가족지원은 매우 중요하므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족지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8)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 김정록의원안에서는 제17조에서 김미희의원안은 제16조에서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 지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러므로 지원센터가 여성장애인의 상담지원, 개인별서비스 계획 수립, 역량강화교육, 주거, 의료지원 취업관련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규정이 필요함

〈표 3-3-1〉 여성장애인에 관한 법률안 내용과 관련법규 내용

김정록의원안	김미희의원안	관련 법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단체(법인)	제2조(정의) 여성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종합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위원회 설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정록의원안	김미희의원안	관련 법률
제6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장애인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 실시
제7조(여성장애인 정책종합계획)	제5조(여성장애인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제8조(모성보호)	제10조(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등)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자녀양육지원)	제10조(모성보호와 보육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 지급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제10조(성폭력 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14조(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정록의원안	김미희의원안	관련 법률
제11조(교육지원)	제9조(교육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과부)
제12조(고용지원)	제13조(고용 지원 등)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김정록의원안	김미희의원안	관련 법률
제13조(자립생활의 지원)	제8조(자립생활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료지원)	제11조(여성장애인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료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6조(의료비 지급) ①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가족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김정록의원안	김미희의원안	관련 법률
제16조(여성장애인 단체 등의 지원)	제15조(여성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설 치운영) 제1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6조(여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지 정 등)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나이 등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청문)	제17조(청문)	
제20조(권한의 위 임위탁)	제18조(권한의 위 임위탁)	

4. 쟁점 검토

1) 법률명

- 여성장애인에 대한 개별 법률을 규정할 필요성은 현재 여성장애인이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법률명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여성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제기됨
- 법률명에 ‘기본법이란 법률단계에 위치하는 규범이나 일반 법률보다 상위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헌법과 일반 법률의 중간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견해가 있으나⁶⁾ 우리 헌법에는 기본법이라는 특별한 입법형식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우리 법률에서 기본법이라는 법명이 붙은 법률은 65개로 많으며 이들 법률이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관계없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준칙 내지 일정한 법분야에 있어서 제도, 정책 등에 관한 기본과 원칙, 기준에 대해 정한 법률을 기본법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등이 있음. 또한 현재 장애인 전반에 대해 ‘장애인기본법안’⁷⁾과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⁸⁾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임. 이 두 법률안은 장애인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장애인관련 법률과의 관계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재조정해야 할 것임
- 두 법률안의 국회에서의 통과여부와는 상관없이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명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다만 현재 장애인관련법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인 안되고 있는 상태를 감안했을 때는 ‘기본법’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바

6) 이태수(2009). ‘통합의 기본 관점과 통합 법안 체계’. 아동청소년통합법(안)의 대안적 모색 토론회 자료집.

7) 이종명의원이 2017.5.24. 대표발의한 법률안

8) 양승조위원이 2017.1.24. 대표발의한 법률안



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과 전체 장애인관련법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법’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음

2) 추진체계

-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추진체계는 매우 중요한데 현재 「장애인복지법」과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실무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추진체계를 따로 규정하기 보다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정책 영역 안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지원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분과위원회에 여성장애인 분과위원회를 두고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에 정책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또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장애인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동 법 제14조에 국무총리산하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가 있고 그 산하에 둘 수 있는 분과위원회 중 여성가족분과위원회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권리 및 지원 정책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다만 추진체계 구성 시 ‘장애인의 구성 시 여성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 내용 중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다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추가로 규정하여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시에도 여성들의 균형적 참여를 위해 제10조제4항의 내용을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3) 여성장애인기본계획 수립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장애인의 인권보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있음
-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장애인기본법안’ 제10조에서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8조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차원에서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이 법안에서 ‘여성장애인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여성장애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이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우선 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그 대책에 관한 사항, 모성권 보장과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 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계획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방안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4) 실태조사

- 장애여성은 장애인을 가진 여성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편적 차별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 둘의 결합으로 인한 특수한 알파의 가중적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는 다중적 차별구조에 놓여 있음
- 장애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서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은 다중적 차별구조에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의 ‘여성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 규정 필요함
- 현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실태조사에서 여성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성별 등 장애인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과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 등에 위한 복지요구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등에 대한 폭력부분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함



5)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당하는 현실을 볼 때 지 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그러므로 지원센터가 여성장애인의 상담지원, 개인별서비스 계획 수립, 역량강화교육, 주거, 의료지원 취업관련 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규정이 필요함

6)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 규정

- 여성장애인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는 교육지원, 모성권보장, 자녀양육지원, 장애아동양육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자립생활의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가족지원, 아동·청소년지원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7) 여성장애인단체등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장애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성장애인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영역에 원활하게 참여하도록 상담,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
- 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활동 내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IV.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 논의 결과 분석

- 본 장에서는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여러 부처 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의 중복 문제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기존의 법률과 정책의 한계점 등을 파악하여, 여성장애인 관련 단독 법률 입법의 필요성 여부, 소관부처 문제, 입법 방식,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정책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장애여성계의 논의 결과를 분석하였음

1. 입법의 필요성 여부

- 장애여성 단독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관련 법 전문가와 장애여성 단체 간에 이견이 있었음
- 여성장애인 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나 입법 형식 등에 있어서는 단체별 의견 차이가 있음. 우선 장애여성계에서 장애여성 단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음. 우선적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에서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업 수혜 결과를 보면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임
- 두 번째는 현행법상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 사업은 주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로 되어 있으나, 이외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부 등 다른 부처에 걸쳐 다양한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음. 지금까지 장애관련 법률이 다수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관계법령의 통합과 조정기능의 부재하여 이들 관계 법령의 조정과 통제하는 기능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임. 여성장애인 관련법들은 장애인복지 입법 목적으로 많은 장애관련 법률 안에서 작동하고 있음. 교육, 고용, 건강, 폭력 등 각각의 분야별로 물론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그 특수성에 부합하는 시책 등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러한 법률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감수성이 낮고 남성장애인과 다른 경험과 욕구 등에 대한 관련성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한 기본법 성격의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한편, 또 다른 장애여성계의 의견으로 장애여성 단독법 제정을 찬성하나, 기존 발의된 여성장애인지원법과 같은 기본법 성격의 입법보다는 여성 관련법과 장애인 관련법에 장애여성에 대한 부분이 평등하게 배치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개별법령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 한 후 장애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즉, 장애여성단체의 의견으로는 여성장애인 단독법을 입법 필요성이 있으나, 그 형식에 있어서는 기본법이나 지원법의 방식보다는 특별법이 타당하고, 타법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조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이에 비해, 법률 전문가들은 여성장애인 단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은 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 단독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한가하는 부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2017년 현재 발의된 장애인 관련법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 여성장애인지원법(가칭)은 2017년 새로 발의된 「장애인기본법」과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간의 관계 설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음. 「장애인기본법」은 2017.5.24. 이종명의원예 의해 발의되었음. 이는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관계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각 법률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발의함. 동 법 제32조에 장애여성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장애인기본법」

제32조(장애여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관점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들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하고 동등한 보장을 위하여 장애여성들의 권익증진, 출산 및 양육 등 모성권의 보호,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유와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들의 완전한 개발,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을 담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률에서 조차 여성장애인은 제4조에만 명시되어 있음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장애여성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겪는 다중적 차별을 고려하여 장애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평등에 기초한 정책개발, 예산 편성 및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두 법률안에 장애여성관련 내용과 가치가 부재한 것은 아니나 두 법률이 현재 발의된 상황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한 기본법 성격의 입법은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참여자 A)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 시니컬하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법이고 여성을 재생산의 주체나 재산권으로만 보는 건 당연히 아니고 여성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욕구들 그리고 교차적 차별관계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텐데 그 부분이 본 법안에는 원지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참여자 B) “법안 필요성이라는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장애여성계)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미 기존에 있던 법률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법률에 여성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2. 사업 범위 중복 및 소관 부처 관련 규정 검토

- 여성장애인 단독법을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법률(안)의 범위와 소관부처, 법률안에 포함되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사항이 이미 타 부처 소관과 관련되어 중복되어 있다는 것임
- 장애여성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장애 관련 정책과 법률에 장애여성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본 법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기에 여성가족부를 소관부처로 지정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장애관련 법 전문가들은 권리보장 차원에서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이에 따라 법률 명칭에 ‘장애여성’과 ‘여성장애인’이 결정되어 질 것으로 보임. 현장에서는 특별한 의미 없이 이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장애여성’이라는 단체명을 가진 곳은 대체적으로 여성가족부 소관의 기관으로 장애를 가진 여성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이라는 단체명을 가진 곳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으로 장애인 중 남성과 다른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법의 목적과 취지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법적 성격의 여성장애인지원법일 경우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세부적 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장애여성계에서 많았고, 이에 비해 법률 전문가와 일부 장애여성단체에서는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특례법’ 형식으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음. 예를 들면, ‘젠더 폭력’, ‘재생산권’, ‘역량강화’ 등 일 수 있으며, 또는 ‘복지지원’, ‘차별대책’, ‘인권침해’ 등을 예로 들었음.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여성 단체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참가자 D) “저희가 봤을 때는 장애여성 관련해서 현장에서 가장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는 재생산권과 같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젠더폭력, 성폭력 같은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어쨌든 장애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라든지 취업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또는 장애여성들에 대한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해요. 그게 현장의 욕구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걸 가장 빠르게 실현해내고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기본법은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별법 형태가 타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참가자 C) “여성장애인 기본법도 마찬가지로 기본법이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시행관련 법률들이 어우러져야 하는 게 생겨요. 그때 다른 법률과 충돌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기본법이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봐야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장애인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며, 어차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해서 하나의 단일법 체계로 가느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이럴 경우 여성장애인 관련된 부분들도 전반적인 걸 선언하고 하는 개별법으로 가더라도 기본법 성격을 갖는 부분으로 가야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 판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 그러나 여성장애인 단독 법안이 기본법 성격의 법률이건, 특별법이건 문제가 되는 것은 입법에 있어 소관 부처 관련 규정을 검토해야 함
 - 이에 대해서 기존 발의된 ‘여성장애인지원법’의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은 분야별 개별 법령과의 중복, 조정 등의 문제로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이 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의 반대이견]

첫째,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야별 개별 법령과의 중복조정 등의 문제로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이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자칫 선언적 규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둘째, 제정안의 지원 내용들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여타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어⁹⁾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은 그 필요성과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의견임.

이상의 찬반 의견을 종합할 때, 여성장애인 지원은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복합적인 문제로서 관계부처 간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이 필요하므로 제정안과 같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법 성격의 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성별에 따른 지원보다 현행대로 장애의 중증여부와 소득기준 등에 따라 지원함이 더 효율적이라 여겨지므로 기존의 장애인 관련 개별 법령들과 현행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활용하여 심층적인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2017년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의견에서도 위와 비슷한 검토의견을 찾아 볼 수 있음

9) 본 보고서의 <표 3-1-2> 참고



[장애인권리보장법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가. 타부처 소관 관련 규정

제정안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여러 분야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타부처 소관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동 제정안에서는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처 소관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소관 부처를 규정해야 할 것임.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의 기본정책 방향과 총괄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의 수준으로 제정할 경우는 대통령 산하의 전담기구에서 이를 집행해야 할 것임.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운영 되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임
- 또한 소관부처가 규정되면 이에 맞는 전달체계가 결정되어야 함. 이러한 전달체계 또는 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장애여성계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참여자 A) “만약 본 법에서의 전달체계인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자립지원해야 한다 주거지원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거 다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중복된다 그러고 소관부처 다 다들거라 그래서 뭔가 Top3 이렇게 정해서 주요업무를 정해서 해야해요. (중략) 이런 전달체계가 제대로 만들 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뱅뱅이 돌아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을 거예요. A to Z 중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달체계의 역할을 제대로 못 잡으면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소용없는 거 같아요. (중략) 그래서 법률이 목적과 취지가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만드는 게 낫다는 입장인가구요. 만약에 만들어야 하면 전달체계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고요. 소관부처와 전달체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서비스 제공)과정에서만 힘을 엄청 빼고 결과적으로 법은 만들어 놓고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법이 되는 거예요.”

3. 입법의 방식: 법률의 제정 혹은 개정

- 입법의 필요성 여부의 판단과 소관부처를 규정한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음. 입법의 형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임. 예컨대, 여성장애인의 특수성 정의, 여성장애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장애인복지법」등 종래의 장애 및 여성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그것임
- 이것은 결국 입법대상이 새로운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이 입법대상인가의 문제임. 신법의 제정은 새로운 상황의 발생으로 다른 입법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기존의 어느 법률에 추가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방식임
-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법 제정 목적을 검토하여 혹시 기존의 법률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기존의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사항을 규율하더라도 유사한 분야를 규율하는 법률이 있어 그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전혀 새로운 분야를 규율하거나 기존의 여러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아울러서 체계적·종합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자문회의에 참석한 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임
- 요컨대 입법정책을 실현하는 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이 입법 경제적인지, 어느 쪽이 법체계의 정합성 유지에 적합한지, 어느 쪽이 국민의 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임



(참여자 B) “개별법령안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작업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다. 중요한 것은 여성관련 된 법률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고, 장애 관련된 법률에 여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들도 세밀하게 정리가 필요하다”

(참여자 A) “여성장애인 독자법을 기본법으로 가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말은 기본법이라고 있는데 뭔가 후속적인 게 나와야 하는데 이중적인 부담만 가져가고 기본법이 만약 대한민국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면 만들려고 하겠지만 사실 힘들게 만들어놓고 내용은 잘하자 이런 내용 위주로만 있고 거기서 힘을 다 빼기 때문에 기본법 만드느라고, 그럼 그다음에 중요한 그런 거 하는 데에는 잘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서 뭔가 법을 제정하려면 제정목적은 정확히 해서 그 목적에 맞는 것만 담는 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특별법이면 일반법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법을 뭘로 상징할 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특별법이라는 얘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게 되네요. 어떠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그 법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이 돼야 해요.”

4.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담보하는 정책 등의 검토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장애여성단체에서는 기본법적 성격보다는 장애 여성의 특별한 이슈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의, 지원체계, 국가 책무 등을 적시하는 특별법 형식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음
- 아직 장애여성계에서 장애여성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일부 단체의견으로는 ①젠더를 기반 한 폭력(장애여성이 경험하는 폭력과 학대, 고립) ②재생산권리(성관계의 주체성(성적자기결정권), 임신/피임의 선택권, 출산/낙태의 결정권, 양육/입양의 정보제공) ③역량강화(문해교육, 실용교육, 소양교육, 인권교육 등 교육기회 제공 및 훈련, 상담, 프로그램 등) 등 세 가지 영역을 제안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기본권 중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교육, 전달체계, 고용, 폭력, 모성보호, 역량강화, 인권, 차별, 인식, 전달체계, 의료, 자립생활지원, 가족지원 등을 규정할 수 있으나, 이중 교육, 폭력, 모성권, 고용 등 네 가지 영역을 선정하여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전달체계 또는 지원체계는 법안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만약 기본법적 성격의 종합적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면,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명칭을 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별도의 특별한 지원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장애여성계에서의 세부 논의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2장에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제도 분석에서 여성장애인이 정책 수혜에 있어 성별 차이를 보인 교육, 고용, 폭력,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 영역에서의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함께 기술하고자 함
- 장애여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심층면접, FGI의 질문내용은 첫째, 장애인 정책 분야에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과 비교하여, 또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 경험, 이용 현황, 둘째는 분야별 법, 정책, 제도, 법, 사업 등에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소외되거나 차별의 경험 유무, 지원 정책에서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법, 정책, 제도, 법, 사업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개선 방향 또는 제도와



법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등임. FGI 실시결과 각 영역별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교육

-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여성장애인의 학력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 이하의 저학력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실제 체감하는 저학력의 수준은 더욱 심각한 상황임. 현재 여성장애인의 교육은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취미·여가 수준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음. 혹은 한글 교육 등 기초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 기초 교육으로, 한글 교육을 넘어서 의식화, 사회화로 연결되지 않는 등 교육의 질이 높지 않은 편임. 또한 성인지 관점이 녹아있는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여성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교육(IL센터 등)에는 성인지 관점이 없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첫째, 현행 장애여성과 관련한 교육 내용인 취미·여가 교육, 단순 기초 교육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며, 취미 여가와 관련된 교육으로는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 교육의 목적이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화, 의식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성인지 관점을 가진 교육 프로그램, 내용, 제공기관이 필요함
- 둘째,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관련 복지전달체계 관계자인 제공인력, 장애인 당사자 등 남녀 구분 없이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리더십교육이 필요함. 교육을 받았던 장애인 당사자들이 다른 기관에 가서 강사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여성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지원체계로는 「여성장애인교육진흥원(가칭)」 설립하여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의 상위에 두고,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또한 현재 교육지원센터(舊, 어울림센터)의 사업비 예산이 1년에 500~1000만원 수준인데, 좋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비, 인건비에 대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장애여성 교육지원센터 역시 복지관처럼 기관과 사업 운영에 대한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교육지원센터 등에서도 양질의 교육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임
- 향후 여성장애인관련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위와 같은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다면, 이러한 교육지원센터는 기본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개인적·집단적으로 장애여성이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에 대해서 이들을 위한 개별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함

- 교육과 더불어 장애여성 교육기관에서는 동료상담을 통해 정서적 문제에 대한 사례관리까지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2) 고용

- 최근 장애인고용서비스의 총량은 급격히 증가하였음. 고용센터, 고용공단(지역사무 포함), 고용개발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광역의 장애인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제공기관은 많으나 고용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여성장애인이 특별히 고려되는 고용관련 제도는 ‘여성장애인 고용 장려금 추가지원’제도가 유일함. 제도 전반적으로 중증도에 따른 추가 지원제도는 있는 반면, 성별에 따른 추가 지원은 없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기능할 수 없는 운영환경을 가지고 있음. 특히 장애인들은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근로능력, 임금, 처우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시설과 근로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유가 더해져 보호작업장 뿐만 아니라 기타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근로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되기에 어려운 현실임
- 고용 영역에서의 개선 방향으로서는 현행 고용 장려금제도에 투입되는 예산 약 1,500억원의 활용도를 재고해야 함. 좀 더 긴급한 곳에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고용 장려금 추가 지원 제도’의 단가를 올리거나 지원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고용 장려금은 의무고용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장애인을 처음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제도가 재운영 될 필요가 있음
-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업종별 적용제외율’이 향후에는 완화되거나 폐지되어야 함.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장



애인이 접근 가능한 업종을 선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업종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3) 가정 · 성폭력

- 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장애인보다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장애인보다 정신적장애인(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는 관계가 있든 없든 피해자의 주변인이었으며, 강간 피해가 많음. 최근 점차 사이버 성폭력이 늘고 있으며, 13세에서 19세 아동의 피해가 24%(2015년 기준)로 나타남. 비장애아동의 경우보다 성폭력 피해 시작 연령이 높는데, 이는 장애아동의 경우 부모의 보호가 청소년기 이후까지 지속되기 때문임. 또한 아동기의 (성)폭력 피해는 성인기로 이어지거나, 폭력피해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개입이 중요함
- 그러나 실제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로는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전국 23개소, 보호시설은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는 2개소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장애인 성폭력 등의 사건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음.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성폭력 문제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결과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법적 해석이 민감하게 이루어져야 함. 장애유형과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표면적인 법적 해석으로 이중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시설의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당면하고 있음. 정신장애인에 대한 케어가 어렵고, 간호사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의학적 케어가 어려움. 또한 장애인 케어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음. 동시에 1366(여성폭력상담소)나 장애인쉼터에서는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인력의 문제)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가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현실임
- 가정폭력 · 성폭력 영역에서의 개선 방향으로서는 여성장애인이 보호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 등 환경조성이 필요함. 특히 폭력의 가해자가 가족이라면, 원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폭력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2개소)와 성폭력상담소(23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규모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 가정폭력 문제에는 정부는 굉장히 소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상담소의 확대가 필요한데,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가 통합·확대되어 성폭력상담소의 확대가 가정폭력상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그러나 비장애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를 통합하는 것은 장애인 배제 가능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음
- 여성장애인 폭력과 관련된 지원체계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기존의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원 2명 이상 충원하고, 상담소마다 긴급피난처(성·가정폭력, 성매매 등)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긴급피난처 기능보장 비용 지원을 전제로 통합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4) 모성권,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등

- 60년대 부터 이어져 온 ‘모자보건’의 개념에서 최근 권리적 측면에서의 모성권, 여성장애인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 영역에서의 재생산권이 화두임. 재생산권은 여성의 건강보다 더 완전하고 적절한 개념이자 보건정책 이상의 인권문제임. 그러나 아직까지 모성권 또는 재생산권은 국제인권조약에서 명확히 개념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나, 이미 국내법, 국제 인권법과 국제법 문서에서 인정되는 데 특정 인권(재생과 성건강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최고 수준으로 획득할 수 있는 권리, 자녀의 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포함한 결혼생활에서의 평등권, 남녀커플과 개인이 재생산과 성인지적 문제에서 자유로이 책임 있게 결정할 권리를 행사하고 가족계획에서 특히 교육을 받고 정보를 이용할 권리, 여성의 선택에 의한 가족계획,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납득할 만한 방법과 여성의 선택에 의한 출산 방법을 이용할 권리, 임신과 출산 중 적절한 건강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차별과 차별적 사회관행, 임신 중 태아의 성감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강제와 폭력, 성 착취, 강제매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포괄하고 있음



- 특히 성적 및 재생산 건강권¹⁰⁾은 자유와 권리를 포함함. 자유에는 자신의 신체와 성적 및 재생산 건강관련 사안에 대한 폭력, 강압, 차별로부터 자유롭고, 책임 있는 결정과 선택을 할 권리가 포함됨. 이에 대한 규범적 구성요소는 이용가능성, 접근가능성, 수용가능성, 질 등임
- 즉, 모성권, 재생산권은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한 구성요소들이 전부 포함되도록 법안이 구성되어야 할 것임
- 낙태는 재생산권 영역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임. 기본적인 차별과 평등원칙은 임신부의 권리가 태아의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우선해야 하는 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처벌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장애여성계에서는 의학적으로 100%의 피임법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낙태죄로 인해 여성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 속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재 제대로 된 성교육조차 실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현 정부가 UN의 권고를 받아들여 실질적인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이러한 차원에서 현행 모자보건법의 문제도 심각한 데 우생학적 낙태 허용사유, 24주의 기간 제한, 준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절차 규정이 없음, ‘태아의 생명권’은 공익이고, ‘여성의 결정권’은 사익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함
- 한국은 기혼보다 미혼의 인공임신중절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으로서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함
- 모성보호 영역에서의 개선 방향으로서는 여성이 바로 ‘재생산 또는 모성’으로 환원되는 권력의 작동을 끊어야 한다는 것임
- 현행 모자보건법은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는 ‘모자보건’ 보다는 출산억제와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시술의 보다 합법적이고 전폭적 도입이라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본 법이 필요 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여성장애인 특별법에 성과 재생산권 등을 바로 적용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모자보건을 개정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10) 2016/3/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2호 “12조,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E/C.12/GC/22&Lang=en

5. 법률 제정 및 내용 검토

- 법률 제정 및 기존 발의된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장애여성 단체(가칭: 여성장애인가기본법제정추진연대¹¹⁾)의견을 수렴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장애여성단체 대표들은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은 동의하지만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찾아 정책, 제도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단체별 사전 협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우선 법률 명에서는 ‘지원’ 보다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조항에서 ‘~지원’ 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확대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고해야 하고, 구체적인 법률 명은 법률 내용이 정해지면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 모든 항목에서 추가해야 할 부분은 성인지적 관점 뿐만 아니라 연령, 장애 유형이 포함되어야 하고, 새로 추가해야 할 조항으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 또한 ‘자녀양육지원’, ‘의료지원’ 등의 조문명은 기본법적 성격에 맞지 않고 법의 시행령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영역들은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음. 예를 들면, ‘장애아동 양육지원’은 ‘가정과 가족 존중’, ‘의료지원’은 ‘건강권’ 등임
- 특히 ‘의료지원’은 가임기 여성만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본 법률의 취지를 너무나 협소하게 정의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건강권’ 등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러한 취지에서의 법률의 ‘지원의 원칙’은 기존 법률과의 차별성이 없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법률 구성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각 각의 조항을 묶어서(폭력, 재생산권, 역량강화, 청소년, 가족 등) 정리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기존의 법령에 강제성을 띤 법조항으로 재개정하기 위하여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11) 본 연대회의는 2017년 5월부터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대모임 임.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주체가 되어, 장애여성네트워크,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순,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한국청각여성회,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공감 등이고 본 연구진도 처음부터 이 연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 장애여성계에서는 이러한 기본법적인 성격의 여성장애인기본법이 만들어 질 경우 장애 및 여성관련 타 법령과의 관계 설정이 주요하며, 이 법이 기존의 여성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활동지원법 등을 개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 문항의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음
- 법 내용도 중요하지만 광범위하게 권리, 인권 측면으로 법률의 내용이 적시 되면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
- 이와 같이 장애여성단체 내에서 아직까지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 제·개정 방향과 법의 목적과 취지 등에 합당한 구체적인 법률 내용은 논의되지 못하였으나, 지속적인 연대회의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과 내용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관련 법률 전면개정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되었음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의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취약한 상황임.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열악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모성보호, 보육지원 등에 있어서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나 역시 필요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도 여전함. 따라서 여성장애인 지원은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복합적인 문제로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인 계획 및 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에 사회적 차별해소 및 약자지원 항목으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이 공약으로 채택된 것을 계기로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장애인관련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총괄 및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성장애인의 단독 법률 제정에 대한 전반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만약 단독 법률이 제정된다면 포함되어야 할 조항 등에 대해 장애여성계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 현재와 같이 관계부처별로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법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적인 법 규정을 통하여 해당 법률이 의도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 대체로 여성장애인 정책 분야에 대한 기초적이고, 포괄적이며, 선언적인 규정을 둬으로써 여성장애인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최우선적 역할 또한 관련 법률에 일정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개별법을 연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장애인실태조사, 장애통계연보 등에서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남성장애인과 비교하거나 전체 인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으



며,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제도분석을 위해 장애성
별통계 형식으로 사업수혜자와 예산 집행결과를 분석하였음

- 이를 근거로 19대 국회 때 발의되었던 여성장애인지원 관련 법안을 토대로
장애인지 및 성인지적 관점으로 법률 안에 추가하거나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
용을 다음과 같이 법률 제정의 방향과 법안 내용 등을 제안하고자 함

2. 제언

- 본 연구에서는 장애관련 법률을 성인지적관점으로 분석하고, 기존에 발의되었던 ‘여성장애인지원법’을 기본적인 토대로 다음과 같은 법 제정의 방향을 정함
- 법 제정의 방향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등과 차별금지 실현
 - 여성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자립생활의 보장
 - 자기결정권 및 자립 등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삶의 실현
 -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접근성의 보장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여성 및 장애 관련 법률 안들을 분석한 결과와 자문위원, 장애여성계, 여성장애인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장애인 단독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명시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법률안에 추가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우선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법률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로 정하고, 단순히 복지 서비스의 확대지원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서비스 지원’ 보다는 ‘권리’ 기반을 강조하기 위한 조문명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기존 법률의 조문명을 ‘교육권’, ‘재생산권과 모성권’, ‘자녀양육권’, ‘장애아동 양육권’, ‘건강권’, ‘근로권’, ‘자립생활권’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 따라서 여성장애인 단독법률의 목적은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으로 해야 함.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 능력개발, 지위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책임을 명시해야 함



- 기존 발의 된 여성장애인 지원 법률안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것은 법의 기본원칙으로 ‘성평등과 차별금지’를 명시하면서 장애와 성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해야 할 것임. 또한 여성장애인 참여보장을 위해 ‘여성장애인 및 대리인 등의 의견수렴과 참여’ 등의 조항을 추가하면서 여성장애인정책을 계획하거나 결정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이나 대리인의 수가 전체 정책 결정권자 수의 5할 이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할 것임
- 이를 통해 기존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별도로 여성장애인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종합 수립을 통해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추진방법, 재원의 조달 및 운영방안,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여성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지표개발, 성별 통계 구축 및 성별영향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명시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은 중앙행정기관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간의 협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행정기관, 유관기관의 협조를 명시하는 조항도 추가해야 할 것임
-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조항도 추가되었으면 함
- 성별과 장애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장애인정책은 연령,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정책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단계별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법률에 최대한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
- 제2장에서의 여성장애인 생활 실태와 제3장에서의 관련 법 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조항과 교육과정과 단계별 평생교육사업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이 시행령을 제정되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모성권과 재생산권, 건강권 등에 대해서는 임신, 출산 등의 지원 뿐만 아니라

- 이와 관련된 개념 정의부터 다시 논의하면서 여성장애인 재생산권과 모성권,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사업 등이 강구되도록 법률 조항을 구성해야 할 것임
- 여성장애인의 근로권을 위한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이루도록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교육 훈련, 직종 개발,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여성장애관련 조항을 분석한 결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논의될 법률에서는 이러한 지원내용도 명시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조항 내용으로는 “국가기관 등과 사용자는 직장 내에서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여성장애인이 특수성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여성장애인 폭력 등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조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폭력피해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김정렬 외 (2010). 장애인 법률, 그 비판과 전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류민희(2016).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장애인법연구. 경인문화사
- 보건복지부. 2017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정책기획평가원(2008).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6
- 변용찬(2006). UN 장애인 권리협약 진행 현황과 의의. 국제사회보장동향
- 서해정, 배선희, 이경민(2016). 여성장애인 모성권 증진을 위한 임신 · 출산 지원
정책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 신은경 외(2013).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 한국DPI, DPI
KOREA.
- 이태수(2009). ‘통합의 기본 관점과 통합 법안 체계’. 아동청소년통합법(안)의 대안
적 모색 토론회 자료집.
- 조한진 외(2007). 장애인권리협약, 날 세우기: 주요 주제를 통해서 본 장애인권리
협약. 한국DPI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연구

발 행 일 : 2017년 9월

발 행 인 : 황화성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 · 인쇄 : (사)다움복지회인쇄사업부

ISBN 978-89-6921-248-1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